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지난해 하반기분 주식 양도세 대상 4853명, 28일까지 예정신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상장법인 대주주 4853명이다.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모바일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국세청장,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유동성컨설팅 집중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리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우미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의 주 내용은 ▲고용중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나눠서 낼게요."... 분납 신청자 7만명, 1인당 2200만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밝힌 사람이 7만명, 1인당 평균 신청금액은 2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에 달했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2018년 이전에는 3000명 정도였으나,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에서 2021년 7만9831명으로 급증했다.

총 분납신청 세액은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 5540억원으로 늘었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6개월까지 이자없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만일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을 반으로 나눠 낼 수 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중 8.1%에 달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23만명으로 이중 74.1%인 17만명은 서울시에 거주했다.